

실적 부진·통상환경 악화·수입차 공세

車 산업 '브레이크'

실적 부진·통상환경악화·수입차 공세 등 3중(重) 먹구름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덮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고용·생산 등 광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주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내완성차업체, '실적 쇼크'> 국내 5개 완성차업체들은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으며 흑한기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의 경우 영업이익이 3분기 288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6.0%나 급감했다. 영업이익률도 1.2%로 3.8%포인트나 하락했다.

3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던 2012년 2분기의 2조5372억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그친다. 기아차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아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1713억원, 영업이익률은 0.8%에 머물렀다.

작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것이지만, 지난해 통상임금 관련 비용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익성이 나빠졌다. 기아차는 작년 8월 법인 판결에 따라 일시적으로 통상임금 총당금 8641억원을 영업 손실로 반영하면서 기아차는 지난해 3분기 장부상 4270억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를 뺀 기아차의 작년 3분기 실질적 영업이익은 4371억원. 결국 3분기 영업이익(1173억원)은 당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개국 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최대 현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실행할 경우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광주공장은 물량 감소가 불가피해져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난해 생산한 차량(49만2233대)의 37.3%가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이때문에 고율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되면 광주 3개 공장 중 1곳 물량만 18만대가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 나온다.

기아차 광주공장 1차 협력업체(50여곳)를 비롯, 이들과 거래하는 수백개의 협력업체 물량감소와 매출 타격도 불가피하다.

기아차 광주공장 뿐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232조)이 현실화되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거나 국내공장보다 생산비용이 저렴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수출 물량 관련 일자리 13만개가 사라질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자동차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수입차 공세 치열> 국내 완성차업체들

의 내수 판매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입차 업체들의 공세도 가속화고 있다.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1~9월 완성차 업체의 국내 판매량은 113만248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17만2653대)에 견줘 3.4% 감소했다. 반면, 올해 1~9월 수입차 누적 판매량은 19만7055대로 전년 동기(17만3561대) 대비 13.5%나 늘었다. 그나마 BMW 리콜 사태

美 고관세 공포

기아, 지난해 37.3% 美 수출 광주 공장 3곳 중 1곳 물량 협력업체 수백 곳 매출 타격 일자리 13만개 사라져

로 수입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점유율이 내려간 것을 감안해도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완성차업체는 차가 팔리지 않고 수익성이 악화하면 협력사로부터 조달하는 부품을 줄이게 되고 이는 부품사의 매출 하락과 공장 가동률 저하, 고용 축소,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성장한 1차 협력부품업체



89개사 중 42개사(47.2%)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28개사(66.7%)는 적자로 전환했다. 급기야 부품업체는 정부에 3조원 규모

수입차 점유율 확대

1~9월 판매 113만2483대 지난해보다 13.5% 증가 국산 수익성 악화·고용 축소 품질 저하 등 산업 전반 악영향

의 금융 지원을 요청, 정부가 부품업체에 우대보증 1조원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조만간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과 연대해 정부에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서를 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말 뿐인 '전기차 선도도시'

친환경차 비중 8.6% 전국 최저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용 승용차 중 친환경차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전기차 선도도시'를 표방해놓고도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승용차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상청, 외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기관장만이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17명 중에서는 제주도지사와 대구시장만 전기차를 이용했고 10명은 휘발유차를, 나머지 5명은 경유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행정기관 공용 승용차 8267대 중 친환경차는 255대(3.1%)뿐이었고, 광역자치단체 공용 승용차 746대 중 친환경차는 268대(35.9%)로 집계됐다.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충남(60.5%)이었으며 서울(54.0%), 제주(52.9%), 울산(46.1%)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8.6%)였으며, 전북(18.8%), 인천(21.4%), 경남(2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승용 차량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車 전시실 없어도 중고차 매매업 가능

국토부 규제 완화...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 마련

앞으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를 창업하는 경우 별도의 자동차 전시공간이나 사무실을 갖출 필요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온라인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에 부과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은 중고차 매매업체나 온라인 중고차 매매 알선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660㎡ 이상의 전시시설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자도 사무실 임대비용 등을 지출해야 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창업 문턱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는 2016년 관련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정부입법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마쳤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등록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전시공간이나 사무실은 없어도 되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춰야 한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서버 이용계약을 맺어야 하고, 1GB 이상으로 서버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 광주전남지회

함께 하면 든든 육아 성공비법

슈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 하는 아빠되기!!

직장남치문화 세로법

직장남 & 대디에게 눈치 주는 대신 '배려'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육아훈수 주의법

서툰 육아에 '훈수' 대신 '힘들지' 따뜻한 한마디 건네기!!

육아대디 지지법

아빠들의 육아에 '칭찬, 격려, 응원'하기!!

직장 가족 이웃

든든육아 동참법

품앗이 육아, 아이 안전 지킴이,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화제의 車




유럽 안전성 최고등급 현대 '넥소'

안전 보조 시스템 등 유료 NCAP 별 5개

현대차 넥소가 수소전기차 중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최고 등급의 안전성을 공인받았다. 넥소는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받았다. 넥소는 유로NCAP에서 ▲ 성인 탑승자 안전성 ▲ 어린이 탑승자 안전성 ▲ 안전 보조 시스템 ▲ 교통약자(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 안전성 등 네 가지 평가 부문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성인 탑승자 안전성의 경우 정면 및 측면 충돌 시 상해영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고 성능이 개선된 센서퓨전(전방카메라·전방레이더) 기반의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FCA) 장착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 탑승자 안전성 부문에서는 뒷자리 안전띠 프리텐셔너(풀어담기는 기구)와 로드리미터(충격 완화장치)를 적용, 어린이 보호 성능과 카시트 장착 편의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넥소에 전방 충돌 성능을 보강한 전방 구조물, 수소 탱크 보호를 위한 차체 구조물을 적용해 충돌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해 고강도 차체를 구현했다. 보행자와 충돌 시 후드를 자동으로 들어 올려 보행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액티브 후드 시스템'도 탑재했다.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로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와 차로 유지 보조(LFA), 후측방 모니터(BVM),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후방 교차 충돌 경고(RCCW) 등도 갖췄다. 수소탱크는 한국·유럽·UN의 수소탱크 안전인증 법규를 충족해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더 편리해진 기아 '봉고III'

후방 주차보조 탑재·화물 적재·운송 최적화

'2019년형 봉고III'가 출시됐다. 봉고 트럭은 개인 용달을 비롯, 택배·소매·오래, 통달·핫도그·튀김을 파는 소규모 이동 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차로, 서민 경제를 대변하는 생계형 차종의 대표주자다. 2019년형 봉고III에는 전 트립(등급)에 '후방 주차보조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탑재됐다. 화물수송 용도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적재화물 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반영했다는 게 기아차 설명이다. 운전석 에어백의 경우 사륜구동 차량에도 기본 사양으로 넣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화물을 싣고 내리기 쉽도록 적재함의 높이를 낮게 하고 단단한 하체 구조와 'c'자 형태의 이중 페달면 프레임 적용해 중량이 많이 나가는 화물도 안정적으로 적재·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형 봉고III의 가격은 ▲ 1t 표준캡 모델 1530만~1773만원(이하 수동변속기 기준) ▲ 1t 킹캡 모델 1540만~1790만원 ▲ 1t 더블캡 모델 1669만~1918만원 ▲ 1t 사륜구동 표준캡 모델 1735만~1919만원 ▲ 1t 사륜구동 킹캡 모델 1745만~1931만원 ▲ 1t 사륜구동 더블캡 모델 1874만~264만원 ▲ 1t 킹캡 LPI 모델 1494만~1597만원 ▲ 1.2t 킹캡 모델 1913만~2049만원 등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